

2013년 환경규제 추진방향과 개선과제

정부는 규제를 통해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불가피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중점분야로 표명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국민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 지 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북대 사법학과,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LLM)
환경부 정보화담당관, 미래기획위원회 파견
tel. 044-201-6390 | seongjw@korea.kr

2013년 정부 규제업무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경제활력 회복 및 미래대비 성장 기반 구축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불합리한 기존 규제를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추어 완화 또는 폐지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강화나 신설이 필요한 규제들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 규제의 과감한 폐지나 완화를 강조해 왔다. 통상적으로 규제가 국민과 기업을 통제하고, 불편과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규제개혁 국민 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규제를 통해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불가피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중점분야로 표명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국민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환경부는 무엇보다도 규제를 통해 환경오염방지와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안전', '효율', '복지' 세 가치를 키워드로 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규제는 국민생활의 든든한 지킴이

우선, 환경보건 및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대상을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기존 화학물질 중 유통량이 많고 유해성이 큰 화학물질은 사업자가 그 독성 자료를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사고대응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실내건축자재는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거쳐 기준초과제품의 사용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효율적 규제를 통한 성장 견인

다음으로, 효율적인 규제수단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질오염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오염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각종 행위제한과 입지제한을 해 왔다. 이로 인하여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기업활동 장애를 발생시키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거나 최적폐수처리기술을 도입하는 등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제한지역별로 중복되는 규제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기관별로 실시하는 환경기초시설과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공동으로 하거나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신청·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자료의 감축과 간소화도 본격 추진할 것이다.

공정한 규제는 복지

끝으로, 취약계층 등 피규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차등규제로 규제의 형평성을 높여 갈 것이다.

연매출 2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2013년 6월분까지)을 추가 감면(50%)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① 2013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②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규제개혁 아젠다는 기업의 환경오염 규제완화, 골프장 임시규제 완화, 금식분리 완화 등...

국민들은 무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의 삶을 보호하고 보강해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정부가 더욱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감독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주요 인식이다(규제개혁 국민의식 조사)를 통한 핵심 전략 과제, 2011년 10월).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감면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납부편의를 고려하여 재활용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에는 일정분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가는 과정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규제개혁 과제의 선정시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규제개혁 업무실태를 점검하여 집행결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새 정부의 화두는 ‘민생’과 ‘복지’이다.

쾌적한 환경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기본적 인권이며 그야말로 복지이다. 환경부는 올 한해 규제를 통해 환경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